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최대 7년... 촉법 연령 하향 검토

당정,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텔레그램측과 핫라인 확보 추진도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딥페이크 게시물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입법으

로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국무조정실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도 산하에 '딥페이크'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전담팀(TF)을 설치한다. 국조실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김준문 1차장이 이끄는 전담팀은 30일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란물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민주당 워크숍 "민생 회복·민주 수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이재명, 다음달 1일 대표 회담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박정호-민주당 이혜식 대표 비서실장은 29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도 지난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여 만이다. 한-이 대표는 앞서 이달 25일 양자 회담에 합의했으나 이 대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회담 공개 범위와 관련해선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는 것으로 정했다. 회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연합뉴스

민주 '의료대란·독도 특위' 본격 가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료 공백과 독도 문제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박주민 의원이 이끄는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특위는 의정 갈등 당사자들을 만나며 의료 공백 사태 대응책을 마련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8일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경증 환자 분산 대책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이 가능하냐"며 "결국 이것은 본인 부담금을 올려 응급실에 가는 것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철거된 성남시청 현장 실사에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4선 의원 출신이다.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군 정선전력교제에서도, 지하철역에서도,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은 친일매국 정권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野 "사과 없는 '尹 국정브리핑' 불통·독선만 재확인"

민주 "민생·의료 대란에 국민 고통"... 조국혁신당 "자화자찬 전파 낭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에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고 연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또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극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다"면서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선 "의료 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이라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과 관련 수사에 윤 대통령이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한 것을 두고는 "국민적 의혹에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공색한 모습에서 특검 필요성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뉴라이트 사관' 논란이 제기된 독립기념관장 임명 책임 등에도 대통령이 '발뺌'했다고 지적

한 뒤, "도대체 윤 대통령이 아는 것은 무엇인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전형적인 전파낭비"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4+1 브리핑은 참담하다. 이미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국민은 불안, 초조, 화병에 시달리는데, 윤 대통령은 혼자만 탄 세상에 사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또 "성과라곤 눈 씻고 찾아보려도 해도 없는데 국정을 잘했다고 자랑만 늘어 놓는다"며 "이제 의료시스템에 더해 국민연금, 교육, 노동까지 다 망가뜨리고 싶은 것인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심은 '차라리 아무 일도 벌어지지 말라' 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조계원 "지방대학 육성에 산업계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 국회의원이 29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대육성법에는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지원토록 하고 있고, 관련 업무의 전담기관을 지역별로 두도록 했다. 또 한 지방협업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계원 의원은 법률 제정 목적과 다르게 지역협업위원회의 형식적 운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에 지역협업위원회를 시도별 및 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구에도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정

토록 했다. 이어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은 현행 기업의 장을 산업계 대표로 확대하고, 시·군협업위원장은 시도협업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에 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기대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